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찰되는 한국사회의 구조변동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I.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한국사회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근래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을 사회학적 언어로 번역하면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 구조변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멀게는 70년대부터, 그리고 가깝게는 90년대에 이미 상당히 빈번하게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성격의 재난들을 경험했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서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 사회학적으로는 일종의 과장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이전의 재난들과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압축적으로 유사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한국사회가 압축적 발전국가에서 압축적 사고국가로 변화했다고 비명이라도 지르듯이, 리조트 지붕이 내려앉는 사고부터 연이은 지하철 사고까지 개발과 발전의 속도전이 부른 참사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구별짓는 또 하나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능한 사회체계의 대응이다. 해경과 정부의 대응은 한국사회가 거의 ‘체계의’ 무정부상태에 이르렀음을 웅변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부정부패와 시장만능주의, 책임자 및 기관의 책임회피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지 않는 매우 익숙한 사실들이다. 그러나 해경과 정부의 대응은 ‘사고’를 ‘학살’로 만들어 모든 국민을 학살의 공범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자기이해를 촉구했고, 그 결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서로 귀결되었다. 교육을 가문의 사적인 입신양명 도구로 이해하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교육감선거의 결과는 ‘공공성’의 개념을 도입 또는 교정하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차이는 사회 시스템과 개인들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좌우의 발전논리 차이를 대변하는 (보수/진보의) 시스템들 간의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시스템과 개인화된 개인들 간의 정치적 관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II. 한국형 산업사회에서 한국형 위험사회로

세월호 참사 이후 빈발하는 재난과 사고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조율되는 한국사회의 발전논리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낸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전근대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이 권위주의적 통치체계 하에서 중첩되는 ‘압축적’ 또는 ‘돌진적’ 산업화 패러다임에 의존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을 담당하는 국민들이 보릿고개와 같은 생존의 위협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신체에 새겨진 가난과 굶주림에 대한 지식은 푸코가 설명하는 바와 같은 ‘담론을 통한 자기규율’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생존을 위해서 근대적 자기이익과 전근대적 규율이 성공적

으로 통합할 수 있었고, 민주적인 문화와 정치체제 없이도 ‘생산자의 규율’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체계의 눈부신 성공과 함께 성공신화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작용을 드러낸 것은 발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집단들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향유한 집단들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1990년대에는 라이프스타일의 개인화 형태로 새로운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밀려오는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휩싸이면서 한국의 사회체계는 ‘배고픔의 규율’마저 외주화했다. 사회체계는 새로운 규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발패러다임의 타성에 의존했다. 그 결과는 가속화된 산업생산에서 가속화된 위험생산으로의 전환이다.

III. 개인화: 잇속을 차리는 집합체적 개인에서 자기규율의 개인으로

‘배고픔의 규율’ 하에서 국민들은 ‘현명’했다. 제도적으로 측정되는 교육수준은 낮았으나,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성공은 집합체 속에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압축적 근대성’의 제반 갈등을 통해 체득했다. 그들은 집단적 의무와 개인의 이익을 집합체 안에서 조정할 줄 아는 그들만의 지식을 가졌다. 국가의 권위주의와 사회의 집단주의를 ‘가족’안으로 내재화했고, 개발 패러다임에 의존해 중산층화를 꿈꾸며 (또 상당부분 거기에 성공하며) 자녀들의 자유를 가족의 재화로 전유했다.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이러한 ‘산업화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지식의 형태를 보여준다. 만일 초기 산업화세대처럼 현실 속에서 스스로 단련한 지식(현명함)을 가졌다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은 그 오랜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통해 통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초기 산업화세대의 규율은 ‘동물적 생존감각’에 기초한 것이었고,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의식은 이제 ‘동물적인 생존감각’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이라는 ‘담론을 통한 자기규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반면에 사회체계는 ‘개발 패러다임’의 무반성적인 타성에 휘말려 있다. 개발 패러다임에 도덕적 자양분을 제공한 ‘동물적 생존감각’의 규율은 ‘성숙한 시민’의 규율로 대체되는 중인데, 개발 패러다임은 타성이라는 허구로 변질되었다.

IV. 국민 대 시민: 민주주의의 원초적 상태

선박회사와 정부라는 책임기관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한국의 전통적 저신뢰 사회에 균열을 내는 ‘민주적 시민들’이다. 그러나 체계화된 민주주의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난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질서를 지키고 공적 기관을 신뢰하는’ 일방적 신뢰 구축만으로는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 시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정치적 물음을 제기했다. 시민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시민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시스템의 타성이 질주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그 시스템의 효용성을 신뢰하는 ‘권위주의적 국민’의 각개격파식 ‘동물적 생존감각’은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 상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웠다.

각개격파식 생존감각에 의존하기에는 시민들이 너무 ‘문명화’되었거나 사회가 너무 복잡해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경제발전에 성공한 한국사회가 어떻게 수입민주주의 또는 아시아적 ‘포스트유신’형 민주주의를 거쳐 ‘민주주의의 원초적 상태’로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980년대의 민

주화는 ‘원초적 상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깊이 있게 성찰되지 못하고, 좌우의 진영논리 대립으로 흡수되었다.

경제발전을 이룩한 현재의 상태에서 한국사회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사회의 풀뿌리 지식으로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것, 즉 시민의 체질이 되고 규범이 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체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시대의 정언명령이다.

V. 좌우를 넘어서

결국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적 대결구도는 한편으로는 위험을 생산하는 구체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의 구축 및 그에 대한 신뢰를 갈구하는 시민들 간의 대결구도이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 하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는 마치 한국사회에서 양당제가 굳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인상에 불과하다.

양당제의 외양은 오히려 한국의 정치제도 속에서 구체제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결집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확인시킬 뿐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현재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국민’과 민주적 ‘시민’ 간의 대결이 진행 중이다.